

하루를 시작하며



고나해
시인

올해 지방선거는 기대에 비해 유난히 맥이 풀리고 뒤편이 길었다. 전국민이 분노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보통의 필부들에게는 차선이 없었기에 거시적인 측면으로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내적 갈등이 컸다. 선거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였다. 이보다 더 큰 문제도 있었다. 바로 제주 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8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하자도 없었지만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주인 없는 안방에 무혈입성하는 권력이 늘어날수록 민

민주주의의 빈 의자

주주의 기초 체력은 고갈되기 때문이다. 선거는 단순히 대표를 뽑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시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이자, 후보자는 검증받고 유권자는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경쟁이 사라진 선거에는 검증도, 선택도 없다. 투표함이 열리기 전에 권력이 주어지는 순간, 유권자는 관객으로 전락하고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가 된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일부 후보들의 전과와 탈세 의혹은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겼다. 세금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지역사회의 살림을 도맡아 공적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의무는 저버린 채 권리만 누리려는 이들이 공적에 도전하는 현실은 우리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공적 의무의 울타리를 탈탈 털어 도망친 이들이 정작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앉겠다는 모순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거대 정당의 독점이 심한 지역이나 무투표 당선 지역에서는 이러한 치명적인 흠결마저 '선량(選良)의 배지'라는 강력한 세탁기를 거쳐 손쉽게 면죄부를 받곤 한다. 지금의 정당들은 검증의 칼날을 무디게 가공할 뿐이다. 선거철만 되면 도덕성과 자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오직 '당선 가능성'이 공천을 지배한다. 결국 정당이 걸러내지 못한 결격 후보들은 무투표로 직행하거나, 유권자들에게 무기력한 '차악'만을 강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제는 단독 출마 시 유권자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찬반 투표제'나 부적격 후보를 낸 정당에 페널티를 가

하는 '공천 책임제' 등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 견제 장치가 없다면 정당의 책임 방지와 무투표 직행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낼 길이 없다. 민주주의는 투표 당일에만 잠깐 켜지는 스위치가 아니다. 후보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정당의 책임,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시민의 눈, 공직자의 윤리식이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숨을 쉰다. 어느 하나라도 고장 나면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작동을 멈춘다. 민주주의는 투표율이라는 수치로만 증명되지 않는다. 시민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는지, 깨끗한 후보들이 링 위에 오르는지가 본질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해지고, 검증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 '빈 의자'에 앉은 권력은 위험하다. 지방자치의 미래는 당선자의 수보다 민주주의의 품격이 우선이다.

사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상한, 전향적 검토해야

제주도교육청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부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병원 진료비 중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90%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제주 외 지역 의료기관 진료 시에 발생한 항공료 등 체제비와 화상 강의 수강료도 지원된다. 다만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연 300만원 이내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총지원액의 한도가 신설되면서 민원이 불거졌다. 도교육청은 조례를 개정해 재적 기간 중 총지원액을 1500만원 이내로 못 박았다. 학생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의 상한선을 신설한 것이다. 이로 인해 종전에는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최대 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연간 최대 한도를 소진할 경우 5년 간만 지원받을 수 있게 달라진 것이다.

제도가 바뀌자 난치병 학생의 부모들은 상한선 폐지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원 한도가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데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입장은 심분 이해 요기만 진료 시에 발생한 항공료 등 체제비와 화상 강의 수강료도 지원된다. 다만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연 300만원 이내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총지원액의 한도가 신설되면서 민원이 불거졌다. 도교육청은 조례를 개정해 재적 기간 중 총지원액을 1500만원 이내로 못 박았다. 학생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의 상한선을 신설한 것이다. 이로 인해 종전에는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최대 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연간 최대 한도를 소진할 경우 5년 간만 지원받을 수 있게 달라진 것이다.

열린마당

안전·청정한 제주를 위한 의용소방대의 발걸음



강정임
제주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

제주는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청정 섬이다. 그러나 해마다 해안가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와 페이구, 플라스틱류 등은 제주 바다의 경관을 해치고 해양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도내 4개 유인도서에서 '안전한 제주! 청정한 제주! 의용소방대와 함께!'를 슬로건으로 해안가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의용소방대

원과 소방공무원 등 290여 명이 참여해 깨끗한 해안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화에 그치지 않았다.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심폐소생술, 119 신고요령 등을 알리는 안전문화 캠페인과 함께 추진해 환경보전과 안전의식 향상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더했다. 환경과 안전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깨끗한 생활환경은 안전한 지역사회의 기본이 되고, 성숙한 안전의식은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힘이 된다. 작은 쓰레기 하나를 줍는 실천과 안전수칙 하나를 알리는 관심이 모여 청정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든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안전한 제주,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뉴스-in

하정우 전 수석 "제주, AI 생태계 최적지"

이제는 단독 출마 시 유권자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찬반 투표제'나 부적격 후보를 낸 정당에 페널티를 가하는 '공천 책임제' 등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 견제 장치가 없다면 정당의 책임 방지와 무투표 직행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낼 길이 없다. 민주주의는 투표 당일에만 잠깐 켜지는 스위치가 아니다. 후보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정당의 책임,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시민의 눈, 공직자의 윤리식이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숨을 쉰다. 어느 하나라도 고장 나면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작동을 멈춘다. 민주주의는 투표율이라는 수치로만 증명되지 않는다. 시민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는지, 깨끗한 후보들이 링 위에 오르는지가 본질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해지고, 검증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 '빈 의자'에 앉은 권력은 위험하다. 지방자치의 미래는 당선자의 수보다 민주주의의 품격이 우선이다.

하정우 전 수석은 특강에서 "제주 섬 자체가 완벽한 실증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체 독립 전력망을 가졌고, 관광과 농수산 등 쌓여 있는 데이터가 있다"며 "여기에 우주와 해양산업 기반 등이 갖춰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

오소범기자 백금탁기자

구명조끼 착용, 생명을 지키는 기본 수칙

제주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 인명 피해자의 상당수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통계를 해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준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38명 가운데 86.8%(33명)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율을 크게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제주는 낚시어선과 유람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나 강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상황이 잦아지면서 해상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소홀히 하는 이용자들이 여전하다.

어선 전복이나 추락, 충돌 등 해상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7월 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되면서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조업 중은 물론 이동하거나 대기할 때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려는 인식의 전환이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에서 해상 안전은 곧 제주 관광의 신뢰로도 직결되는 문제다.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구명조끼 착용이라는 기본 원칙이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양씨 병상(향년 101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6월 17일
아들 김홍익 며느리 홍경애
딸 김복신 사위 서오철
김희선 강덕수
나현 오영호
정희 오현호
효신 고창민

제주백도라지 분말
관상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평인
전화 064-783-8987, 010-573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토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